

李 대통령, 美·日·中 정상회담 통해 ‘실용외교’ 의미 재확인

경주 APEC 결산

가장 큰 숙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일 간 협력 중요성 공감대 이뤄
중과 경제·민생·문화 중심 성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며 숨가쁜 ‘외교 슈퍼워크’를 보였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의 본 행사 자체도 중요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이 주요국과 소통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다. 그러나 일부 우려를 불식하며 옛새간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지며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가장 큰 숙제였던 대미투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의미가 재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위기에 봉착한 다자주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전통한복 목도리를 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경주에 머물며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달아 회담을 가졌다. 주요국과의 연쇄 회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성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는 매년 최대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10년간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마스가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한미 통

화스와프’나 ‘5% 내 현금투자’ 등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며 외환위기를 피하는 불상사는 막은 셈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 덕택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광범위하게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전략무기를 하나 더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을 위한 협상을 거쳐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승인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평가다.

한일 정상회담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화기에애하게 마무리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치인 중에서 ‘극우’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복원한 양국 셔틀 외교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또 다음 한일 회담은 일본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11년 만에 한국에 국빈방문한 시진핑 주석과는 한중 간 민감한 문제보다는 경제·민생·문화 중심으로 성과를 얻어냈다. 지난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따로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총 6건의 양해각서와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번 정상회의의 주간 중 가장 긴 시간(97분) 회담을 한 것을 보면, 발표된 것보다 더 다양한 분야가 의제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같은 순환형 행정 이어지길”



인터뷰

박 함 윷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주거정책 전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실무형 프로그램·질의응답·상담 구성

정권교체에도 청년정책 지속돼야
완벽할 수 없지만 피드백으로 성장



박함윷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이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메트로경제

준비하면서부터 정부의 주거 정책이 현장과 가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는 실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

기 쉽게 정리해 현장과 정책의 거리를 좁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박함윷 보좌역은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는 정책이 청년에게 직접 다가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총괄팀을 지낸 박준우 주무관님과 함께 ‘정책이 먼저 찾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직접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상사를 설득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등 다양한 업무가 그의 손을 거쳤다.

박 보좌역은 “처음엔 자립준비청년은 라인 교육에서 출발했는데, ‘처음 알게 된 제도가 많았다’, ‘정부가 직접 알려주니 신뢰가 생겼다’는 반응을 계기로 전국 확산을 결심했다”며 “2024년 8월 첫 상담소를 열고 군 부대·대학·정부부처·청년센터 등으로 확장하며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월 1~2회 순회 상담을 이어갔고, 언론에도 100건 이상 보도

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상담소를 모 군 부대에 꾸렸을 때 부대 대대장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장병들에게도 좋고, 갓 임관한 하사나 소위 같은 간부들도 미리 자신의 주거를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박 보좌역은 누구나 상담소를 찾으면 계약, 공공주택, 대출상품, 청약까지 주거 정책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그는 “상담소는 부동산 계약(민간 전문가), 공공주택(LH), 대출상품(HUG), 청약(부동산원) 등 청년 주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이후 질의응답과 개별상담을 병행했다”며 “현장에서 청년들이 구체적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며, 행정이 문서가 아닌 사람의 얼굴을 보는 일임을 실감했다”고 떠올렸다.

박 보좌역은 주거상담소 사업을 ‘순환

형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책 설계자가 사무실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정책을 배우고,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완성하는 효능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부처별로 보면 참 관찮은 정책들이 많다. 그런데 정작 청년 삶 속에서는 정책들이 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들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꾸준함보다는 ‘새로움’이 강조되다 보니, 좋은 사업이 자리 잡기도 전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박 보좌역은 “그러나 그 실태 속에도 행정이 배워야 할 ‘현장의 언어’가 있다. 정책은 완벽할 수 없지만, 피드백이 다음 설계로 이어질 때 행정은 성장한다”며 “지금의 청년정책 역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다음 세대 행정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野, 728兆 규모 예산안 심사… 지역사랑상품권 등 충돌 전망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 열어
ABCDEF 핵심산업기술에 10.6兆
野, ‘포폴리즘 정책’ 예산삭감 집중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표 예산’ 반영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6~7일 종합정책질의로 중앙부처 수장에게 예산안

의 적절성을 질의한다. 오는 10~11일엔 경제부처, 12~13일엔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후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보다 8% 이상 늘었다.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했다. 국세가 7조8000억원, 세외수입이 14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잡혔다. R&D 예산이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7000억원(19.3%) 늘

어 역대 최대 인상공을 기록했다. 정부는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ABCDEF’ 핵심 산업 기술 개발에만 1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폴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예산 삭감에 집중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 지역 주요 시·도지사들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포폴리즘 ‘재정정책’에 맞서 민생과 성장 중심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국제유가도 상승… 美-中 갈등완화 등 원인

>> 1만 ‘유류세 인하폭’…서 계속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2021년 11월)되기 이전인 1당 820원보다 10%(82원) 낮은 738원이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인하율이 7%로 내려감에 따라 유류세는 820원 대비 7%(57원) 낮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10월 말 수준에 비해 1당 25원(738원→763원) 오른 셈이다.

경유에 적용하는 유류세도 10월 말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올랐다. 액화석유가스(LPG)와 부탄도 173원에서 183원으로 각각 10원씩 올랐다.

국제유가도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PEC) 정상회의 기점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완화를 비롯해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미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10월31일(현지시간) 기준 배럴당 60.98달러를 찍었다. 10월21일(57.82원) 수치와 비교해 3.16달러(5.46%) 올랐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두바이유도 이 기간 마찬가지로 흐름을 보였다.

국제유가는 통상적으로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석유협회는 휘발유 값 상승과 관련해 ▲국제유가의 연속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일부 축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